[검찰개혁]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검찰은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중추기관입니다.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엄격한 법집행으로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이고, 모든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있고, 정치적 영향을 받아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검찰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고, 정의에 편에 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며,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새누리의 진단

- 검찰총장 후보 추천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 필요
- 검사장들의 승진 및 보직인사 엄정한 심사 필요
- 검사 직급의 차관급 남용 해소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
-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
-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검사의 직급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
-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
-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
- 검사 임용시 예비후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한 후 인성심사를 거쳐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사 임용 금지

새누리의 실천

- 검사 임용 및 승진 보직 인사 관련 법령 개정

비리 검사 퇴출

새누리의 진단

-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 필요
-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필요
- 검사 징계사유 명확화 및 처벌 강화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
- 감찰본부의 인력을 증원하고, 감찰 담당자는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
- 징계의 사유를 향응, 금품수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새누리의 실천

- 검사 적격심사 및 징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 감찰본부 인력 증원 예산 반영
- 비리 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근거 규정 마련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 · 통제

새누리의 진단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
-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
-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
-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강화

새누리의 실천

-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조직 개편
-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검 · 경 수사권 조정

새누리의 진단

-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개시 · 진행권을 허용했지만, 수사절차가 번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 조사를 받는 등 국민의 불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되어야 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 필요

새누리의 약속

-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 마련
-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
-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

새누리의 실천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